

네트워크회의
인권활동가네트워크워크숍

전북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주민 차별과 변화의 모색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1. 지역사회의 현황

●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삶 - 제도가 드러낸 이주민 차별의 문제

-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의 공적 마스크 등의 방역과 구호 조치, 최소한의 지원에서 이주민 차별이 두드러졌음. 이는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드러냈음.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음. 전북지역에서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해당 조례와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은 배제되었음.

● 차별적 일터와 고용허가제가 그려내는 풍경

- 이슬람교를 믿는 이주노동자가 전북지역의 돼지고기를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회사에 호소했음. 해당 이주노동자는 본국에서 사업주로부터 정확한 노동환경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음. 그러나 공장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돼지고기 처리 라인에 배치되어 일하게 되었음. 이주노동 등 지원 단위에서 이후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돼지고기 관련 업무라는 것이 한글로만 명시된 것을 확인함.
- 해당 이주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이주노조를 통해 종교적 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으나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는 사실상 무시와 차별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결국 이주노조와 지역노동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사업장 변경 문제를 해결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도 있었지만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타 지역에서도 사업주가 이슬람교를 믿는 노동자들에게 유사한 과정을 거쳐 돼지고기를 다루는 업무에 배치되었고 이주민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

2. 변화의 모색

- 이주민 차별을 만들어내는 지방자치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차별, 고용허가제 폐지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기